

서울경기지역중심 대학생(150개 대학, 평균 23.21세, 1367명) 법/정치인식

“ 당/정/청과 야당/언론의 활용을 희망 - 이는 법률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정치적 편향 없는 순정한 설문자료임 ”

- 흡수저는 노력해도 남처럼 잘 살 수 없다 - 2명중 1명 <49.67%>
- “자유” 를 삭제하는 개헌만큼은 막아야 <90.49%-작년엔 82.60%>
- 유권(전)무죄, 무권(전)유죄 현상은 여전하다고 본다 <86.91%>
- 주한 미군 철수해도 우리국방 걱정없다 <19.09%-부동의 80.69%>

■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할 수 있다 <48.72% - 3년전 51.66%>

--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<범죄할> 수 있다 <51.94%>

■ 제21대 국회의 “지난 1년 평가” 는 잘 못했다고 본다 <78.57%>

-- 국회는 나와 우리의 삶에 <많은 영향 - 41.99% 포함> 영향을 준다 <91.22%>

■ 코로나19에 대해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<61.45%>

-- C-19 초기대응능력<46.31%> 백신확보능력<72.35%> - 문 정부 책임

■ 통일은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여야 한다 <79.74% 작년엔 65.07%>

-- 통일은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여야 한다 <0.76% - 1367명중 10명>

I. 조사배경 · 개요 |

1. 입법/사법감시,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30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봉사단 (총재 김대인)은 매년 법의 날(4.25)과 유권자의 날(5.10)을 기해 청년 대학생 법정치 의식조사를 해 왔던 바, 서울대(104명), 연세대(79명), 고려대(202명), 이화여대(80명) 등 전국 150여개 대학교의 대학(원)생의 통일 및 대북정책, 법·정치인식, 사법실태,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.

대면조사(일부 비대면) 방식으로 전체 1367명<<코로나 이전엔 3~5천명>>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0일(화)부터 4월 26일(월)까지 7일 동안 33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하였다.

1) 조사기관 : 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(법정치)봉사단 (총재 김대인)

2) 조사방법 : 33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<<C-19규제로 예년의 1/4 정도>>

3) 조사대상 : 남녀 청년·대학(원)생 1367명

〈표본오차는 95%신뢰수준에 $\pm 2.65\%P$ 〉

가) 성별 응답자 현황

구 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남 자	526	38.48%
여 자	838	61.30%
무응답	3	0.2%
계	1367	100.00%

나) 학력별 응답자 현황

구 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재 학	963	70.45%
휴 학	187	13.68%
졸 업	123	9.00%
대학원 재학	81	5.93%
기타/무응답	13	0.95%
계	1367	100.00%

다) 응답자 평균연령 : 23.21세 <총 1367명, 남 528명 / 녀 838명>

2. 목차 - 주요 응답 개관

- 1)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: 비판적 태도 많아, 5개 항목(3쪽)
- 2) 법과 사법, 시사에 견해 : 사법 불신 높아, 12개 항목 (3쪽)
- 3)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 : 불만족, 3개 항목 (4쪽)
- 4)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: 불신과 무책임 비판, 13개 항목(5쪽)

3. 이번 조사를 주관한 **김대인 법률연맹 총재**는 “코로나19 사태에,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생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”며 **“현 정부는 코로나19 대확산의 책임을 광화문집회나 종교단체 등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대학생들까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,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”**며, “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방역과정의 예측가능성, 투명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또한 ‘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’는 액튼경(Lord Acton)의 말이 시사하듯, 부정 부패예방/척결과 민주주의 실현의 **핵심은 권력견제**라면서, “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**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**이 되므로, **자유민주적 헌법이념과 실질적 법치**가 실현되도록 **청년대학생과 주권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주인노릇에 충실해야 한다**”고 역설했다.

※ 붙임 - 주요 항목 분석(3쪽) 및 항목별 응답현황 (6쪽)

상세한 설문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(www.goodlaw.org) 공지사항 참조 끝.

법률연맹 총본부 / 한국대학생봉사단

전화. 02) 523-8760~7 goodlaw@goodlaw.org 《문의 : 홍 금 애 실장 / 윤 소 라 부장》

Ⅱ. 주요 항목 분석 |

1.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: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·회의적 태도 여전

- 1) ‘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’ 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은 16.39%(지난해 28.42%)인 데 비해 부동의 한다는 의견은 83.25%(지난해 69.99%)로 높게 나와, 지난해보다 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졌다.
- 2) ‘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’ 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19.09%(지난해 24.77%)인 반면, 부동의하는 의견이 80.69%(지난해 74.77%)로 높았다.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로 인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- 3) 대북경제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75.79%(지난해 75.30%)가 부정적(부동의)이었으며, 국내에 있는 탈북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51.72%(지난해 46.48%)가 부정적(부동의)이었다. 대북 지원 확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, 탈북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부정적인 의견인 5%정도 높아졌다.
- 4) 통일의 적합한 형태에 대해서는 ‘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’ 이 79.74%(1090명)로 매우 높았고, 남북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인 17.62%(239명)였으며,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라고 응답은 0.76%(10명)였다.

2. 법과 사법, 시사에 견해 : 사법불신과 사회적 불평등 의식 여전히 높음

- 1) ‘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(개헌)은 해서는 안된다’ 에 동의하는 의견이 90.40%(1237명)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(9.51%)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.
- 2)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라는 말에 대해 ‘그런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’ 는 의견이 86.91%(지난해 85.26%)로 여전히 높게 나왔으며, ‘동의하지 않는다’ 는 겨우 12.07%(지난해 14.08%)에 지나지 않았다.
- 3) 준법의식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는 ‘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’ 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.35%(지난해 66.92%)인 반면, 부동의하는 응답은 33.58%(지난해 32.67%)였다.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.
- 4) ‘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’ 에 동의하는 의견은 51.94%(지난해 48.87%)였고, 부동의 하는 의견은 47.70%(지난해 50.96%)였다. 지난해보다 준법의식이 조금 약해졌음을 나타냈다.

- 5) ‘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’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48.13%(지난해 46.35%)이었고, 51.65%(지난해 50.99%)는 부동의하였다.
- 6) ‘10억을 준다면 1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’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8.72%(지난해 44.62%)였고, 부동의한다는 응답은 50.91%(지난해 55.11%)였다. 동의한다는 의견이 지난해보다 4%p가량 높게 나와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음을 반영했다.
- 7)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 전망에 대해 ‘고위공직자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’라는 의견이 23.56%(지난해 24.04%)인 반면, ‘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.’라는 의견이 46.89%(지난해 49.27%)로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많았다.
- 8) 수사나 재판중 사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‘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’는 의견이 67.15%로 많았으며, ‘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’는 의견은 27.21%였다.
- 9) 비친고죄로 개정된 이후 저작권법 악용 포럼들이 합의금을 중용하거나,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‘저작권법은 세계표준이 친고죄로 재개정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36.80%로 높게 나와, 제21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입법과제의 하나로 나타났다.
- 10)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 ‘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다’는 응답은 25.24%(지난해 32.67%)인 반면, ‘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비폐해될 것이다’는 응답은 60.50%(지난해 50.73%)로 지난해 보다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가 높아졌다.
- 11)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 ‘기업의 직원채용 확대’라는 응답이 47.84%(지난해 43.29%)로 가장 많이 나왔고, ‘창업 확대 등 새로운 직업군 발굴’이라는 응답이 35.19%(지난해 30.41%)로 다음이었으며,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공무원 증원’ 응답은 7.46%(지난해 8.37%)에 불과했다.
- 12) ‘흙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’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50.11%로, 부동의한다는 의견(49.67%)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,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‘흙수저는 노력하더라도 남들처럼 잘 살 수는 없다’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
3.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 :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

- 1) ‘국회가 자신(국민)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’는 의견이 91.22%(지난해 90.04%)로 많았다 (‘많은 영향을 미친다’ 41.99% 포함)이었고, ‘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’는 의견은 8.27%(지난해 9.30%)에 불과해, 청년 대학생들도 국회의 역할을 크게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2) 제21대 국회의 활동에 대해 평가에서 ‘아주 잘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33명으로 2.41%였고, ‘잘 하고 있다’는 의견은 13.09%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15.5%인 반면, ‘못하고 있다’는 의견은 56.25%(769명), ‘아주 못하고 있다’는 의견은 22.31%(305명)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78.56%로 응답자 10명중에 8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3) 실효성 논란이 있는 국회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‘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.’라는 의견이 34.89%(477명)인 반면, ‘대통령이 임명강행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’는 의견이 62.40%(853명)로 긍정적인 의견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,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.

4.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부정의견이 우세

- 1)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‘중국발생 당시 정부의 초동대응조치 미흡’이라는 의견이 46.31%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, 다음으로 ‘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예배 등 집회’가 26.48%. 그리고 ‘8.15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시위’라는 의견은 5.34%였다.
- 2) ‘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’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2.52%(718명)로 청년 대학생들도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3) ‘본인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’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87.49%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,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12.36%로 본인은 대체로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- 4) ‘백신 부족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’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67.08%(917명)로 높게 나왔으며, ‘부족한 의료인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시험에 불응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의사면허시험재실시를 해야 한다’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41.99%인 반면,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7.50%로 높게 나왔다.
- 5) ‘코로나 19로 인하여 명동, 이태원 등 유명 상권이 문을 닫고,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와 공영방송 등에서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’는데 대해 대학생의 53.99%(738명)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.
- 6) ‘K-방역의 성과로 자랑하던 국산주사기의 불량으로 70만개를 회수했다’는 보도에 허탈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70.59%(10중 7명)로 높게 나와 대학생들도 K-방역의 실상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.
- 7) ‘코로나 19에 대한 언론보도’와 관련하여 ‘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하다’는 의견이 32.55%로 높았고, ‘코로나 19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’는 의

견이 28.90%로 부정적 의견이 61.45%인 반면, ‘코로나 19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’는 의견은 33.94%로 10명중 3명만이 코로나 19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.

- 8) ‘우리 나라의 백신접종 지연사태’에 대해 ‘백신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’이라는 의견이 53.18%(728명)로 과반을 넘긴 다수를 차지하였고, ‘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 과잉때문’이라는 의견은 28.60%에 불과했다.
- 9) ‘정부의 백신생산계획 등 부실공개’와 관련하여 ‘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’는 의견이 80.83%(1105명)로 높게 나왔으며, ‘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 함구해야 한다’는 의견은 17.85%(244명)에 불과했다.
- 10) ‘백신확보를 못해 11월 집단면역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’에 대해 대학생들은 ‘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’는 데에 72.35%(989명)가 응답하였고, ‘정부의 책임이 아니다’라는 의견은 겨우 22.75%(311명)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대응조치 미흡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.
- 11) ‘우리나라에서 주로 접종되고 있는 AZ백신에 대한 안정성’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의견은 37.90%(‘매우 신뢰한다’는 응답 4.10% 포함)인 반면, ‘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0.42%(‘전혀 신뢰하지 않는다’는 응답 16.31% 포함)로 두배 정도 높게 나왔다.
- 12) ‘정부가 코로나 19를 정치적 선동 목적으로 악용한다’는 것에 대해 ‘악용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’이 38.62%(528명)로 높게 나왔으며, ‘악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’는 의견은 56.40%(771명)에 그쳤다. 정부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Ⅲ. 항목별 응답현황 |

1.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

■ 정부의 대북정책관련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)

▶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261	19.09%
☐ 2. 아니오	1103	80.69%
☐ 3. 무응답	3	0.22%

▶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224	16.39%
☐ 2. 아니오	1138	83.25%
☐ 3. 무응답	5	0.37%

▶ 국내에 있는 탈북자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657	48.06%
☐ 2. 아니오	707	51.72%
☐ 3. 무응답	3	0.22%

▶ 대북경제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323	23.63%
☐ 2. 아니오	1036	75.79%
☐ 3. 무응답	8	0.59%

■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	1090	79.74%
☐ 2.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	10	0.73%
☐ 3. 남북한 대등한 입장(사실상불가능?)에서의 통일	239	17.48%
☐ 4. 기타/무응답	28	2.05%

2. 법과 사법, 시사문제에 대한 입장

■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(有權無罪 無權有罪: 권력실세는 죄가 없고,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)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.	1188	86.91%
☐ 2.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.	165	12.07%
☐ 3. 기타/무응답	14	1.02%

■ 귀하는 언론이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.	918	67.15%
☐ 2.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	372	27.21%
☐ 3. 기타/무응답	77	5.63%

■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)

▶ ‘자유’를 삭제하는 헌법개정(개헌)을 해서는 안된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1237	90.49%
☐ 2. 아니오	130	9.51%
☐ 3. 무응답	0	0%

▶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907	66.35%
☐ 2. 아니오	459	33.58%
☐ 3. 무응답	1	0.07%

▶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710	51.94%
☐ 2. 아니오	652	47.70%
☐ 3. 무응답	5	0.37%

▶ 우리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658	48.13%
☐ 2. 아니오	706	51.65%
☐ 3. 무응답	3	0.22%

▶ 10억을 준다면,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666	48.72%
☐ 2. 아니오	696	50.91%
☐ 3. 무응답	5	0.37%

▶ 흙수저라도 노력하면,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685	50.11%
☐ 2. 아니오	679	49.67%
☐ 3. 무응답	3	0.22%

■ 귀하는 2007년 비친고죄로 줄속개정된 이후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변호사 또는 로펌들이 합의금을 중용하거나 협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저작권법을 세계표준인 친고죄로 재개정하면 로펌들의 합의금 중용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다.	503	36.80%
☐ 2.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나(제3자)고발하게 하여 저작권법위반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.	590	43.16%
☐ 3. 법파라치 합의금중용행태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.	200	14.63%
☐ 4. 기타/무응답	74	5.41%

■ 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소위 공수처)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고위공직자들의 부정·비리가 사라질 것이다.	322	23.56%
☐ 2. 검찰의 수사기능만 약화시킬 것이다.	333	24.36%
☐ 3. 대통령 등 공수처 인사권자의 영향만 커질 것이다.	641	46.89%
☐ 4. 기타/무응답	71	5.19%

■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기업의 직원채용 확대	654	47.84%
☐ 2. 공무원증원	102	7.46%
☐ 3. 단기 알바직 확대	30	2.19%
☐ 4.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	76	5.56%
☐ 5. 창업확대 등 새로운 직업군 발굴	481	35.19%
☐ 6. 기타/무응답	24	1.76%

■ 귀하는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등 코로나19 경제위기대책으로 세금인상이 예견되고 있는데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인상이 필수적이다.	345	25.24%
☐ 2. 세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삶이 더욱 피해해질 것이다.	827	60.50%
☐ 3. 세금인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다.	144	10.53%
☐ 4. 기타/무응답	51	3.73%

3.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

■ 귀하는 현재의 제21대국회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아주 잘하고 있다.	33	2.41%
☐ 2. 잘 하고 있다.	179	13.09%
☐ 3. 못하고 있다.	769	56.25%
☐ 4. 아주 못하고 있다.	305	22.31%
☐ 5. 기타/무응답	81	5.93%

■ 귀하는 국회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많은 영향을 준다.	574	41.99%
☐ 2. 조금은 영향을 준다.	673	49.23%
☐ 3.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.	113	8.27%
☐ 4. 기타/무응답	7	0.51%

■ 귀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의 임명을 할 수 있고, 또 임명강행하고 있는 현행 ‘인사청문회제도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.	477	34.89%
☐ 2.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.	853	62.40%
☐ 3. 기타/무응답	37	2.71%

4.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의견

■ 귀하는 코로나19확산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중국발생당시 정부의 초동대응 조치 미흡	633	46.31%
☐ 2. 8·15광복절광화문대규모시위	73	5.34%
☐ 3.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예배 등 집회	362	26.48%
☐ 4. 국민개개인의 거리두기 등 정부방역정책 비협조	231	16.90%
☐ 5. 기타/무응답	68	4.97%

■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 선동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.	528	38.62%
☐ 2. 악용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.	771	56.40%
☐ 3. 기타/무응답	68	4.97%

■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▶ 코로나19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718	52.52%
☐ 2. 아니오	644	47.11%
☐ 3. 무응답	5	0.37%

▶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1196	87.49%
☐ 2. 아니오	169	12.36%
☐ 3. 무응답	2	0.15%

▶ 작금 백신절벽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917	67.08%
☐ 2. 아니오	440	32.19%
☐ 3. 무응답	10	0.73%

▶ 부족한 의료인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시험에 불응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재실시를 해야한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574	41.99%
☐ 2. 아니오	786	57.50%
☐ 3. 무응답	7	0.51%

▶ 코로나19로 인하여 명동, 이태원 등 유명 상권이 문을 닫고,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와 공영방송 등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738	53.99%
☐ 2. 아니오	626	45.79%
☐ 3. 무응답	3	0.22%

▶ K-방역의 성과로 자랑하던 국산주사기의 불량으로 70만개를 회수했다는 보도에 허탈감을 느꼈다.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예	965	70.59%
☐ 2. 아니오	391	28.60%
☐ 3. 무응답	11	0.80%

■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하다.	445	32.55%
☐ 2.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.	464	33.94%
☐ 3.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.	395	28.90%
☐ 4. 기타/무응답	63	4.61%

■ 미국은 자국민의 면역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백신 ‘부스터샷(boostershot·추가접종, 3차)’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접종률 2.9%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백신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당국 때문이다.	727	53.18%
☐ 2.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 과잉 때문이다.	391	28.60%
☐ 3. 독자적인 국내백신개발의 지연 때문이다.	183	13.39%
☐ 4. 기타/무응답	66	4.83%

■ 정부는 국내 한제약회사가 오는 8월부터 코로나백신을 외국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15일 밝혔지만, 백신의 종류와 제약사 등에는 함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.	1105	80.83%
☐ 2. 시장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 함구해야 한다.	244	17.85%
☐ 3. 기타/무응답	18	1.32%

■ 백신확보를 못해 11월 집단면역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19백신 확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.	989	72.35%
☐ 2.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.	311	22.75%
☐ 3. 기타/무응답	67	4.90%

■ 우리나라에서 주로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(AZ)백신은 덴마크 등이 접종을 완전 중단하는 등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. 귀하는 코로나19백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자	응답비율
☐ 1. 매우 신뢰한다.	56	4.10%
☐ 2. 대체로 신뢰한다.	462	33.80%
☐ 3.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.	603	44.11%
☐ 4.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.	223	16.31%
☐ 5. 기타/무응답	23	1.68%